

황우여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하자”

일자리·대북 정책·한국형 복지 등 3대 중장기 과제 논의 제안

주민번호 대체 식별번호 부여·사기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검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주요 국가 정책의 중장기적 수립과 실현을 위해 ‘대연정(大聯政)’의 성격의 초당적인 ‘국가 미래전략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가미래전략기구에서 논의할 3대 중장기 과제로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 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고안 등을 들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 황 대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할 일반 식별번호 부

여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협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출 개인정보를 악용해 이뤄지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정보보안기구’ 신설도 제의했다.

황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해왔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경정책에서 확연한 차별이 가능해야 하고 최소한 대표하려는 이유로는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

고 중복정당 문제가 생겨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아울러 “2014년을 지방정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지방정부 혁신 운동’을 선도하겠다”며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준수 ▲지자체-공기업-출연기관-교육감 재정 통합 관리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입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남북 관계와 관련, “여야가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 통일정책 마련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국회 내 ‘한반도 통일 평화협의체’ 설치를 재자 제안하고 북한 인권법 처리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와 남북자 상봉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이밖에 경제 민주화의 중단 없는 실천을 역설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원하고자 강소기업 육성, 부문별

새누리 황우여 대표연설 분야별 주요 내용



정치

-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 기조단체장선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추진

안보

- 국회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 설치
- 이산가족 회대 및 정례화
- 2월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경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할 '국가적 협력 체계' 구축
- 대주주 적성검증 심사 강화방안 도입, 공정경제 동반성장정책 입법화 등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사회

- 정부 국민정보보안기구 설치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일반 식별번호 부여 검토
- 일자리 공시제 강화
- 국가청년 일자리 통합망' 구축

‘사다리 정책’ 추진을 통한 불평등 해소,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여수 기름유출 사고·AI 문제

여야, 정부 부적절 대응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95년 시프린스호 사고 때도 이번 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주인 GS 칼텍스가 유출량을 허위로 보고 했다가 들불이 났다”며 “방박대에 물이 10병 쏟아진 것과 100병 쏟아진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신고가 늦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평소 방재 훈련 등을 제대로 해 방재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면 이런 오류를 범하겠느냐. 초동 단

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이라고 주장했다.

AI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살처분에 대한 국가 지원이 80% 이상 이뤄지게 돼 있는데 80%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나머지 재정부담을 지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준진 의원은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살처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강기정 “광주교도소 부지 구치소 활용 안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4일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일부를 구치소로 활용하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통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민의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구치소 계획을 고집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불통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교도소가 갖는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그

역사를 만들어 냈던 광주시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역사와 보존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주교도소 부지에는 민주주의 전당을 비롯해 기존에 검토됐던 방안들에 덧붙여 김대중 정신 계승과 노남의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담당할 김대중대학원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해 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安신당 간접제안 있었으나 거절”

새누리 원희룡 전 의원, 합류설 관련 해명

카드사 정보유출피해 집단소송 대리인 나서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은 4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철수 신당’ 합류설과 관련해 간접 제안이 있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간접적인 제안이나 어떤 얘기들이 있었으나 제가 (합류하지 않기로 한) 몇 가지 이유와 판단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신당의) 현재 모습을 보면 안철수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정당의 범위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며 “또 안 의원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전국적인 대안정당’이라는 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않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전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소장을 냈다.

이번 1차 소송의 원고는 KB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피해자 152명, NH농협카드 피해자 151명 등 총 514명으로 각 변호사들이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홍보·모집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1인당 100만원 총 5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새정추 오늘 전주서

신당 창당 설명회

‘지역균형대책위’ 구성

민주, 지방선거 대비

최근 신당의 명칭은 ‘새정치신당’(가칭)으로 결정한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다음달 창당 추진에 맞춰 민주당 덕발인 전주를 5일 방문해 신당 창당 설명회를 연다.

새정추는 이날 덕진예술회관에서 ‘새정치의길, 전북도민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신당 창당 설명회를 갖고, 질의·응답을 통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윤여준 새정추 의장과 윤장현·김효석·이계안·새정추 공동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북지사 후보 등 지방선거 전략과 창당, 민주당과의 지방선거 연계 등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민주당은 4일 6·4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균형화’를 위한 원내 지방정책·임법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책위는 지역의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언론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 조기 발굴 및 민주당 특유의 지역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민주당은 대책위에서 개발한 지역정책을 4월 1일 입시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책위원장은 전병현 원내대표, 단장은 장병완 정책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또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권역별 책임위원으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대책위에서 개발한 지역정책을 4월 1일 입시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3년안’ 위헌 논란

국회 법사위 ‘지방교육자치법’ 심사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14개 사항 가운데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 요건 3년안’이 위헌 사항으로 넘어왔는데 지방교육자치법은 오를 심사를 보류하고 원내대표단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고지했다.

일률 규정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애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에서 넘어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원안대회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후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다음날로 연기됐다.

법사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국

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정개특위에서 지방선거 관련 14건의 개정사항이 넘어왔는데 지방교육자치법은 오를 심사를 보류하고 원내대표단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고지했다.

권 의원은 “18대 국회 때 교육감 선거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에서 교육경력 5년 조항은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한시 일률 규정을 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한을 줬다가 뺐는 결과로 소급입법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3년 교육경력 조항 폐지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폐지 후 2018년부터 3년 요건 조항을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4년 제12기)

- 개강일시 : 2014. 3. 3(월) 초급아간 18:30
중급아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4. 1. 23.(목)~3. 8.(토)
- 수업기간 : 2014. 3. 3(월)~2014. 8. 16.(토)
- 수강료 : 월 300,000 원(민간자격)
중급 아간 : 30명(국가공인자격-민간자격도 동시취득)

- 기초개인수강료 이수시 충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글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증도 기획부여
-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국립한글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 강사 취업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노인 복지 및 각급 사회복지기관 강사 취업
- 초·중등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한문강사 추천

- 3급~사법준득기회 부여

- 문 의: 062)850-3582~4
• 지도교수: 010-3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 010-3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도대체 스피치 말 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면접 준비 실전과정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